

민족운명 바꿔놓은 외신 위서

위서의 사회사 — 11

김삼웅 | 《대한매일》 주필

1945년 12월 27일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이란 제목으로 외신을 보도했다. 모스크바 3상 회담이 진행중인 시점에서 반탁운동에 불을 지른 이 기사는 3상 회담의 내용을 신탁통치만으로 국한시켜 보도하면서 미국이 즉시 독립을 주장하고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한 것으로 잘못 보도한 것이다. 왜곡된 한편의 외신이 분단체제를 고착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해방공간에서 느닷없이 날아온 글 한편이 민족사의 운명을 바꿨다면 믿지 않을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글이 무슨 매국조약이거나 선전포고문이 아닌 외신(外信)이었기 때문이다.

모스크바 3상 회담에서 한국문제 결정해

해방의 감격으로 온 국민이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던 1945년이 저물 무렵이었다. 정확히는 그 해 12월 27일,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에는 미국의 번즈 국무장관, 소련의 몰로토프 외상, 영국의 베번 외상이 모였다. 그들은 한국문제에 대한 4개항에 합의하고 다음날 세 나라 수도에서 동시에 발표키로 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제 청산과 모든 시설을 취할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

② 조선임시정부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미·소 점령군의 대표로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동위원회는 조선의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한다.

③ 독립국가의 수립을 원조·협력할 방안을 작성함에는 또한 조선임시정부와 민주주의 단체의 참여하에서 공동 위원회가 수행하되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최고 5년 기한으로 4개국 신탁통치의 협약을 작성한다.

④ 2주일 이내에 조선에 주둔하는 미·소 양군 사령부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한다.

모스크바 3상 회담의 4개항 결정은 엄격하게 분석할 때 우리에게 크게 불리한 내용은 아니었다. ③항의 ‘5년 기한 4개국 신탁통치안’

이 제기됐지만, ①항의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 수립’이나 ②항 미·소 점령군 대표의 ‘조선의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조선의 민주주의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미·소 공동위원회와 협력하고 합의 내용을 수정·조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방향에서 뒤틀리기 시작했다. 그 해 12월 27일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이란 제목으로 외신을 보도했다. 이 기사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3국 외상회담을 계기로 조선독립 문제가 표면화하지 않는가 하는 관측이 농후해가고 있다. 즉 번즈 미 국무장관은 출발 당시에 소련의 신탁통치안에 반대하여 즉시 독립을 주장하도록 훈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3국간에 어떤 협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불명하나, 미국의 태도는 카이로선언에 의하여 조선은 국민투표로써 그 정부의 형태를 결정할 것을 약속한 점에 있는데, 소련은 남북 양지역을 일괄한 일국 신탁통치를 주장하여 38선에 의한 분할이 계속되는 한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면서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점령’이란 큰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이 보도를 근거로 이승만과 한민당, 김 구와 임시정부 세력은 반탁운동을 전개했다.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국민의 반발은 마치 별통을 쏘셔놓은 듯했다. 즉각적인 자주독립만을 생각했던 국민에게 신탁통치란 상상할 수도 없는 청천벽력이었다.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 모든 국민이 반대에 나섰다. 이승만·김 구 세력은 물론 조선공산당과 조선인민당도 반대했다. 좌익세력의 경우 1946년 1월 2일부터 공식적으로 찬탁의 입장을 취할 때까지 개별적으로는 반탁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외신 왜곡보도가 국론 분열시켜

모스크바 3상 회담이 진행중인 시점에서 반탁운동에 불을 지른 이 기사는 3상 회담의 내용을 신탁통치만으로 국한시켜 보도하면서 미국이 즉시 독립을 주장하고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한 것으로 잘못 보도한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12월 25일자 미국 발 기사라면서 정확한 출처도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기사의 배경에는 당시 국내 언론을 통제

하던 미군정 당국의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반소·반탁감정을 형성하기 위한 모종의 국내외적인 음모가 개입된 것인지는 지금까지도 의문으로 남는다.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는 미국의 일관된 정책이었다. 소련이 한반도를 단독으로 장악하는 것을 우려해 신탁통치안을 밀고 나간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신탁통치안은 그 역사와 곡절이 복잡하다.

1943년 10월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식민지 하에 있는 한민족을 강대국 보호 하에서 자치 능력을 키워 독립자격을 갖춘 다음에 독립시킨다는 구상을 스탈린에게 통고했다.

그 후 테헤란 회담에서 “한국은 독립하기 전에 약 40년간의 훈련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스탈린에게 제의했다. 1945년 2월 알타회담에서는 역시 스탈린에게 “한국에 대해 미·소·중 3국 대표로 구성된 신탁통치를 할 구상”이라면서 그 기간은 “필리핀을 독립시키는 데 40년이 걸렸으나 한국은 2, 30년이면 된다”는 구체안을 제안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제안을 받은 소련이 3상 회담에서 4개항의 문안으로 정리해 제출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 우리 국민은 잘못된 보도와 외세의 농간으로 소련이 신탁통치를 제안하고 미국은 반대한 것으로 알고서 격렬한 반탁·반소운동을 벌였다.

소련 패망 후 최근 나타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소련은 소련대로 신탁통치를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즉, 스탈린의 모든 정책은 38선 이북에서 소련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따라서 한반도에서 신탁통치를 시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1945~1946) 소련이 원한 것은 한반도가 소련에 위협을 주

“3상 회담의 주요 내용은 조선민족의 임시정부 수립에 있었던 만큼 당시의 국제정치 역학상 이를 수용하는 것도 현실적인 해결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눈앞에 닥친 이데올로기와 정파간의 대립 그리고 감성적인 민족주의에 함몰되고 외세의 농간에 놀아나서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는 존재가 되지 않는 것과 한반도가 소련의 전후 복구 사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런 목적은 북한만으로도 충분했다. 남한은 농업지대여서 중공업 시설도 없었고 지하자원도 보잘것 없었다. 따라서 소련은 소련군의 점령지역인 북한에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전념했고 이 목적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미군과의 교류 내지는 남북간의 통합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다(이정식, <스탈린은 한반도 신탁통치를 반대했다>)

그러면서 미·소는 신탁통치안을 내걸고 한반도를 먹이사슬로 만들어 놓락한 것이다.

모스크바 3상 회담을 전후해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

기에 엉뚱한 기사가 신문에 보도되고 이 보도를 통해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정당들은 제각기 ‘제 논 물대기’에 바빴다. 좀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열강의 움직임과 민족의 장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통찰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반탁운동으로 통일의 기회 놓쳐

이승만·김 구 중심의 우익세력은 신탁통치안을 소련의 제안으로 알고서 반소·반공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고, 박헌영 등 좌익세력은 찬탁에서 반탁으로 우왕좌왕하면서 사회주의국가 건설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종속관계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우익은 찬탁을 지지한 좌익을 ‘민족반역자’ ‘소련의 주구’라고 매도하고, 좌익은 ‘반탁운동은 국제 정세의 무지에서 나온 민족자멸책’이라면서 피비린내 나는 투쟁을 벌여서 분단과 6·25 동족상잔을 예비했다.

좌우익 지도층은 3상 회담 합의 내용 가운데 신탁통치 부문에만 관심을 두고 더 중요한 임시통일 정부수립 부문에 관해서는 거의 무관심했다. 이승만과 김 구의 한계도 이 대목에서는 분명해진다. 노회한 이승만은 찬탁이나 반탁보다 어떻게든 단독정부라도 수립하겠다는 생각에서 탁치문제에 대응했고 김 구는 감성적인 민족주의 입장에서 반탁을 택했다.

좌우익의 지도층이 좀더 역사의식이 있었고 국제정세를 내다보는 안목을 갖췄다면 찬탁 또는 반탁으로 단일화해 통일정부 아니면 몇 년간 꼭 참고 신탁통치를 받은 뒤 완전독립 통일국가를 세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찬·반탁 양론으로 갈리고 거기에서 다시 단정수립과 통일정부 수립으로 갈라져서 민족분단의 계기를 만들었다.

3상 회담의 주요 내용은 조선민족의 임시정부 수립에 있었던 만큼 당시의 국제정치 역학상 이를 수용하는 것도 현실적인 해결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눈앞에 닥친 이데올로기와 정파간의 대립 그리고 감성적인 민족주의에 함몰되고 외세의 농간에 놀아나서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찬·반탁으로 갈라진 치열한 대립은 해방공간에서 민족해방운동·통일운동의 분열을 일으켜 분단체제를 고착시키는 기틀이 됐으며, 따라서 민족통일에 결정적 타격을 입히고 단독정부가 수립되는 기반을 마련해줬다. 왜곡된 한편의 외신이 민족의 진로와 국민의 운명을 이렇게 바꿔놓았다. ■